# 탄 원 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사건**

수신 서울고등법원 귀중 (담당 재판부 제출 전 확인)
사건번호 사건번호: _____ (제출 전 조회)
피고인 윤석열
탄원인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직권남용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된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신중하게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 행사 역시 법률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사상의 논란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피신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1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이 경과를 바탕으로 탄원합니다.

1심 법원은 대사의 직위가 신분과 소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는 점, 실제 소환 조사 불응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명 당시 수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범인도피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외교적 인사행위가 언제 형사상 도피행위로 평가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대사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명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정한 사람을 수사로부터 도피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행위의 적절성·형사적 고의·실제 수사 방해 결과를 구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항소심에서는 대사 후보 검토와 내정, 출국금지 관련 정보의 전달, 법무부의 해제 절차, 임명 이후 실제 외교업무, 귀국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누구의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범인도피죄를 판단할 때에는 피수사자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확보하는 것을 실제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 공관장이라는 공개된 지위의 임명이 일반적인 은닉·도피와 같은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조사를 시도했고 어떤 방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사·출입국 관리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각 별도의 증명 문제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논란이 큰 인사일수록 오히려 형법의 엄격한 증명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도 1심이 제시한 법률적 이유를 깊이 검토하시어 무죄 판단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모든 의혹을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증명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탄원인 _____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담당 재판부 제출 전 확인)